

#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 있어서 정치적 정보의 영향: 18대 총선 유권자를 중심으로

이소영 | 대구대학교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정치적 정보의 불균등한 분포가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18대 총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졌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이념성향과 후보자·정당선택, 그리고 투표참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진 가상 유권자들은 연구의 대상이 된 모든 태도와 선택에 있어서 실제 유권자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은 이념성향과 전반적인 정책 이슈에 있어서 실제 유권자들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정치적 정보가 충분하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정보가 정치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정보의 편중적 분포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의 편중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I. 서론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들의 필요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을 대표로 선출하는 일이다. 이러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있어야 하며 또 각 후보자의 정책이 자신의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줄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전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정치인 및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정책 및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적절하게 소통하지 않고 있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정책적 포지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 등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중화된 움직임이 아니며, 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공동체의 단일한 타깃과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과 경험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국민의 낮은 정치적 관심과 지식 또는 정보의 정도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큰 결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Delli Carprini and Keeter 1996; Goren 1997; Kuklinski and Quirk 2000; Nicholson et al, 2006). 정치적 지식 및 정보의 정도가 낮은 대중은 정책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필요나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에 부응하는 정책이나 정치가를 선택하기 보다는 보다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정치참여의 정도가 낮아 자신들의 필요를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하고 관철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 결과 정책은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 즉, 엘리트 계층의 필요에 부응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심리학자들은 일반대중은 정보의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휴리스틱(heuristic)들을 동원하여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는 그다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Lau and Redlawsk 2001; Lupia 1994; Lupia and McCubbins 1998; Popkin 1991; Sniderman et al. 1991). 즉,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나 지식이 없어도 인물에 대한 선호나 정당에 대한 선호,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지역의 선호 등등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이나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경험주의 학자들은 정치적 정보가 낮은 사람들 또는 잘못된 정치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휴리스틱들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정보를 위한 휴리스틱의 사용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지식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정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 왔다(Kuklinski and Quirk 2000; Nisbett and Ross 1980). 이와 함께 대중에게 정확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또는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을 때 정치적 선택의 결과가 상당히 바뀔 수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Althaus 1998; Bartels 1996; Fishkin and Luskin 1999; Luskin et al. 2002).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정보 및 지식과 민주주의의 역학 관계에 대한 논쟁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2008년 선거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 정도가 선거 결과와 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한다.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엘더스(Althaus 1998)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든 유권자들이 최대한의 정치적 정보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유권자들의 정책적 선호와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측정함으로써 정치적 정보 및 지식의 정도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경험주의 학자들과 정치심리학자들 간의 논쟁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제

3절에서는 이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제4절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정치적 정보의 정치과정에서의 중요성과 영향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정치적 정보의 효과

유권자들의 정치행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 대중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정치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낮은 편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정치적 관심과 지식이 낮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생산해 내는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초기 미시간 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컨버스(Converse 1964)가 ‘대부분의 대중은 개별 이슈를 이념적 스펙트럼과 같은 추상적 개념과 연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의견(opinion)을 가지기가 힘들며 따라서 이슈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전개한 이후 많은 경험주의 학자들이 개별 유권자들의 배경과 성향에 따라 정치적 정보와 지식의 정도가 매우 다르며 이 차이는 정치적 태도와 행위의 차이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왔다.

제이코비(Jacoby 1986, 1991, 1995)는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보수-진보의 이념적 틀에 의거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행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의 분포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컨버스의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델리 카피니와 키터(Delli Carpini and Keeter 1996)와 알바레즈(Alvarez 2001)를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정치적 정보가 많을수록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오피니언과 그들의 투표 선택 간의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보가 낮은 사람들은 후보자의 이슈 포지션을 이념

스펙트럼에서 중간 정도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보다 양극에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나왔다(Alvarez and Franklin 1994; Glasgow 1999; Judd and Lusk 1984; Linville 1982).

1990년대 이후 경험주의 학자들은 정치적 정보가 많은 사람들과 정보가 적은 사람들이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있어 상당이 크고 지속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왔다. 잘리(Zaller 1992)는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지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엘리트 담론으로부터 전달되는 정치적 메시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텔리 카피니와 키터(1996)는 정치적 정보량의 차이가 정치적 가치, 관심, 행위, 태도의 지속성 및 일관성 등 개인의 정치적 행태 전반에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정보의 결여는 정부와 후보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대중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틀(Bartle 2000) 또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식의 차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이념적 위치나 정치적 태도에 차이가 온다는 것을 보이면서 이슈 투표 모형은 정치적 지식이 낮은 사람들의 투표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사람들이 모두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정치적 선택과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측정하여 정치적 정보가 사람들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바텔스(1996)는 사람들이 모두 완전한 정보를 가졌을 때 투표 결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엘더스(1998)는 1988년과 1992년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면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이들의 선호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피시킨(Fishikin)과 러스킨(Luskin)을 비롯한 몇몇 심의민주주의 연구 학자들은 정치적 토론 및 심의 과정을 통한 정치적 정보의 상승이 사람들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몇 차례의 대규모 의사실험 과정을 통해 보여 왔다.

이 일련의 연구들은 불완전한 정치적 정보가 정치과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권자들 간의 정보의 불균형적 분포가 정치적 선

호와 선택에 그리고 정치적 결과에 왜곡을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정치적 정보가 낮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단서(cue)를 이용하여 정보가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au and Redlawsk 2001; Lupia 1994; Lupia and McCubbins 1998; Popkin 1991; Sniderman et al. 1991).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도 정치적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의 지름길로서의 단서들 덕분에 복잡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판단의 단서는 엘리트들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되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인물 자체에 대한 호불호, 정당에 대한 선호, 소속 집단의 정치적 선호, 후보자의 현직자 여부,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등 정책적 위치가 아닌 여러 기준들을 포함한다.

이 단서들 중 정치적 선택에 도움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단서들은 정당에 대한 선호와 인물에 대한 판단이다. 한 정당을 좋아하는 유권자는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이도 정당이 선택을 위한 준거집단 역할을 하여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선택할 수 있다(Campbell et al. 1960; Jacoby 1988).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능력, 생김새, 개인적 역사, 카리스마, 신뢰성, 목소리 등등 또한 매우 중요한 선택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iller et al. 1986; Rahn et al. 1990). 라우와 레드로스크(Lau and Redlawsk 2001)는 특히 정치적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러한 정당이나 인물 단서를 이용하여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나이더만 등(Sniderman et al. 1991)에 의하면, 이러한 단서들을 이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선택을 조직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론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은 적은 정보로도 적절한 추론과정을 통해 선택에 이를 수 있는 '추론하는 유권자(reasoning voter)'이다(Popkin 1991). 이러한 추론은 완벽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보다는 최소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론을 통해 정치적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Lupia 1994).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접근은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경험주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도 경험주의 학자들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정치적 정보의 영향을 부인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의 제시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 휴리스틱스 중심의 접근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일 것이다. 특히 몇몇 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휴리스틱스를 이용하여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리스틱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문맥적·구조적 지식(Kuklinski and Quirk 2000), 동기(motivation), 인지적 능력(Mondak 1993) 등을 갖추어야 휴리스틱스를 사용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휴리스틱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접근법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여러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는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앨더스(1998)의 접근법에 주목한다. 앨더스의 방법론은 단순히 모든 유권자들을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여 그 정치적 결과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뮬레이션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페이지와 샤피로(Page and Shapiro 1992)에 의하면, 개인들의 정치적 태도와 의견은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하지만 집합적인 태도나 의견은 이러한 개인 간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선택이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들을 집합화 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보가 낮은 유권자들의 랜덤한 의견들이 서로 상쇄되어 참의견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앨더스는 휴리스틱스의 정치적 효용성에 대해 도전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정책 선호 또는 정치적 선택이 집합화 되었을 때 유권자들이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페이지와 샤피로 등이 제시하고 있는 집합적 태도의 신뢰성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앨더스의 방법론을 빌려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 수준의 정치적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8년 총선 이후 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의 ①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이념적 정향과, ②후보자

및 정당 선택, 그리고 ③투표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치적 정보의 정치과정에서의 영향을 고찰한다.

### III. 정치적 정보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 1. 정치적 정보의 측정

정치적 정보의 영향을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해 검증해 온 연구자들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문항을 이용하여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적 정보의 수준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정보의 측정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텔리 카피니와 키터(1996)의 방법론을 빌려와 2008년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 수준을 측정하였다.

텔리 카피니와 키터는 정치인이나 정치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응답자의 정보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자의 주관적 평가, 이념 스펙트럼에서의 정당간·정치인간의 상대적 위치, 그리고 각각의 정책에 대한 정당간·정치인간의 상대적 위치 등에 대한 답을 각 개인별로 정답과 오답으로 정리하여 이들을 전부 더한 값으로 정치적 정보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인이나 정치제도 등에 대한 실질적 지식만으로도 또는 설문조사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정보를 측정했던 기존의 연구들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정치적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2008년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에는 텔리 카피니와 키터가 제안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항들이 전부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 자료에 있는 문항 중 텔리 카피니와 키터가 제안하고 있는 유형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문항을 정치적 정보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원하였다. 이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정보를 측정하는 데 이용

되었다.

- ① 실제적인 정치적 지식(factual political knowledge)을 묻는 문항 3개: 대통령  
의 입기, 여당의 당명, 국무총리 이름
- ② 정당의 상대적 이념 위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의 상대적  
이념 위치, 통합민주당과 친박연대 및 진보신당의 상대적 이념 위치, 창조  
한국당과 민주노동당 및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의 상대적 이념 위치, 자유  
선진당과 진보신당 및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의 상대적 이념 위치, 자유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상대적 이념 위치,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의 상대  
적 이념 위치,
- ③ 정치가의 상대적 이념 위치: 박근혜, 손학규 및 심상정의 상대적 이념 위치,  
문국현과 심상정, 문국현과 이회창, 문국현과 정몽준, 문국현과 박근혜 간  
의 상대적 이념 위치

각 항목에 대하여 정답은 1로, 오답은 0으로 코딩하여 전체 항목(16개)을 더한 후 그 값을 각 개인의 정치적 정보값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모름 또는 무응답은 오답으로 간주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은 그 이념적 차이가 명확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위주로 선택되었다. 측정 과정에서 창조한국당과 문국현이 반복 활용된 것은 여타 정당이나 정치인에 비해 그 이념적 위치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여 정치적 정보의 수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측정의 결과 응답자들의 정치적 정보의 값은 2부터 15까지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뮬레이션 방법

1988년과 1992년의 미국선거자료(National Election Studies Data)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에서 정치적 정보 및 정치적 정보와의 인터렉션 항목들을 응답자들의 정치적 정보의 최대값으로 대치하고 그 외 항목들은 각각의 평

균값으로 두었을 때 각 정책 이슈 항목에 대한 찬반 확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한 엘더스(1998)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벌 규제 해제, 복지 예산 축소, 대북 지원 강화, 대미 동맹 강화, 사교육 규제, 국가 발전을 위한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태도(5점 척도) 및 응답자들의 이념(11점 척도), 지역구 후보자 선택, 정당 선택, 투표 참여 여부 등 10개 항목이다.

6개 정책 항목과 이념 항목은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후보자 및 정당 선택과 투표 참여 여부는 프로빗 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된다. 종속변수가 이분법적 변수값으로 구성되는 프로빗 분석에서는 양대 정당 및 그 정당의 후보자에 투표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각 모델의 독립변수는 정치적 정보 변수 외에 설문 항목에 있는 개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 일체와 (양대) 정당에 대한 선호 및 이들의 정치적 정보 변수와의 인터랙션으로 구성되어진다.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들은 교육 수준, 가정의 수입, 나이, 성별(여성), 농어촌지역 거주, 도시지역 거주, 결혼 여부, 본인 및 가족의 노조 가입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종교(가톨릭교, 불교, 개신교, 기타 종교), 호남 출신, 영남 출신, 그리고 정당 선호(한나라당 선호, 민주당 선호)로 이루어진다.<sup>1)</sup> 인터랙션 문항을 독립 변수로 포함함으로써 각 모델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당 선호 변수가 독립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정보의 수준과 상호작용을 하여 개인의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이념과 관련하여 회귀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Y_i = \alpha + \beta_1 I_i + \sum \beta_k D_{ik} + \sum \delta_k (I_i \times D_{ik}) + e_{ikv} \dots \dots \dots (1)$$

1) 교육수준, 가정의 수입, 나이를 제외한 각각의 독립변수들은 모두 더미변수로 재코딩되어 사용되었다.

$Y_i$  = 각 정책 이슈에 대한 응답자  $i$ 의 선호 위치

$I_i$  = 응답자  $i$ 의 정치적 정보 수준

$D_{ik}$  = 응답자  $i$ 의  $k$ 번째 인구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 (정당선호변수 포함)

그리고 후보자, 정당 및 투표 여부와 관련한 프로빗 모델은 다음과 같다.

$$\text{prob}(Y_i = 1) = \Phi[\alpha + \beta_1 I_i + \sum \beta_k D_{ik} + \sum \delta_k (I_i \times D_{ik})], \dots \dots \dots (2)$$

$Y_i$  =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응답자  $i$ 의 선호 위치 또는  $i$ 의 투표 참여 여부  
 $I_i$ 와  $D_{ik}$ 는 위의 회귀분석 모델 경우와 같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 ① 회귀분석 및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각 모델의 독립변수 및 (독립변수x정치적 정보)의 계수를 구한다.
- ② 정치적 정보 값과 인터랙션 항목의 정치적 정보 값을 최대값인 15로 치환한다.
- ③ 위의 단계 ①에서 얻은 계수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정치적 정보의 값을 15로 두어 개별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 및 이념 정향, 그리고 정치적 선택 및 투표 참여 여부를 계산한다.
- ④ 위의 단계 ③에서 얻어진 개별 유권자들의 값을 집합화(aggregate)하여 응답자의 정책 선호 및 후보자·정당 선호 확률, 그리고 투표 참여 확률을 다시 구한다. 이 값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해진 가상 유권자들의 집합적 태도이자 선택 및 참여율 계산에 이용되는 값이 된다.

## IV. 시뮬레이션 결과

### 1. 정치적 정보와 유권자의 정책 선호 (회귀분석)

회귀분석에 사용된 정책 이슈는 ‘전적으로 찬성’부터 ‘전적으로 반대’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6개 항목으로서, 재벌 규제 해제, 복지 예산 축소, 대북지원 강화, 대미동맹 강화, 사교육 규제, 국가 발전을 위한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의 이슈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큰 값을 그 이슈에 대한 찬성, 작은 값을 이슈에 대한 반대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이들 항목들을 ‘1=전적으로 반대’부터 ‘5=전적으로 찬성’까지로 재코딩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회귀분석에는 각 이슈에 대한 태도와 유권자의 이념 정향을 비교해 보기 위해 11점 척도(0=진보, 10=보수)로 개인들이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직접 평가한 이념 변수도 포함하였다.

〈표 1〉 대북지원 강화에 대한 회귀분석 (1=전적으로 반대, 5=전적으로 찬성)

독립변수	메인 효과 (Main Effects)		인터랙션 효과 (Interaction Effects)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정치정보수준	-.192+	.116		
교육수준	-.148	.127	.010	.011
가정의 수입	-.040**	.015	.003**	.001
나이	.005	.016	-.000	.001
성별(여성)	-.578	.394	.035	.033
농어촌지역 거주	-.433	.631	.042	.054
도시지역 거주	-.323	.417	.019	.035
결혼 여부	-.830*	.419	.058	.036
본인/가족 노조가입	-.483	.600	.044	.051
화이트칼라	.315	.543	-.010	.046

독립변수	메인 효과 (Main Effects)		인터랙션 효과 (Interaction Effects)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블루칼라	.496	.766	-.042	.063
자영업자	-.885+	.506	.063	.042
가톨릭신자	-1.164	.759	.083	.063
불교신자	-.677	.626	.053	.052
개신교신자	-1.263+	.664	.099+	.055
기타 종교	-1.040	.638	.083	.053
호남 출신	.518	.536	-.006	.046
영남 출신	-.362	.449	.021	.038
한나라당 선호	-.194	.449	.034	.038
민주당 선호	.297	.626	-.049	.051
상수	5.106	1.382		
R-squared	0.122			
N	793			

+p < .10, \* p < .05, \*\* p < .01

〈표 1〉은 6개 정책 이슈와 유권자 이념 중 대복지원 강화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이 연구의 주된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그 분석에서 나온 회귀계수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든 정책 및 이념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대신 하나의 예로써 랜덤하게 선택된 대복지원 강화에 대한 결과만을 보기로 하겠다.

〈표 1〉에 나타난 회귀계수들 중 대복지원 강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보면,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가 높을수록,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결혼한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그리고 개신교도인 경우 대복지원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정의 수입과 개신교도 여부는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량에 의해 통제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복지원 문제는 우리사회의 진보-보

수라는 이념적 틀에서 자주 해석되는 만큼, 정보 수준과 수입이 높은 유권자가 대북지원 강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의 보수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하겠다. 교육수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북지원 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엘더스의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표 1>의 대부분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엘더스가 설명하고 있듯이, 이는 인터렉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야기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로부터 초래된 현상으로 해석되어진다. 실제로 회귀계수들의 방향성(+/-)을 분석해 보면 거의 모든 변수에서 기대하는 방향대로 그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다시 해본 결과 나온 회귀계수가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결과 되는 회귀계수와 그 방향과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해서 변수들을 생략할 경우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연구의 분석에서 더 심각한 문제(specification 문제)가 야기되므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전체 회귀계수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표 1>의 회귀계수들은 시뮬레이션 과정에 투입된다. 위의 공식 (1)에 정치적 정보의 값을 15로 설정한 후 이 회귀계수들을 이용하여 각 개인의 오피니언을 다시 계산한 결과를 집합화(aggregate)시킨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는 설문에서 조사된 유권자들의 실제 정책 선호 및 이념적 정향과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가진 가상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 및 이념적 정향을 비교한 표이다.

모든 정책 이슈와 이념 정향 항목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값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 수준이 높아지면 현재와는 다른 이념적 정향이나 정치적 행태를 보이게 되고 따라서 정책적 피드백으로서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실제 유권자들과 충분한 정보를 가진 가상 유권자의 정책 선호 및 이념적 정향

정책 이슈 (5점 척도)	실제 평균	가상 평균	평균 변화	N	정치적 정보 효과
재벌에 대한 규제 전면 해제	2,819	4,043	1.224***	784	재벌 규제 해제 강한 찬성
복지 예산 축소	2,385	2,069	-.315***	793	복지 예산 축소 보다 더 반대
대북 지원 강화	2,492	2,577	.085*	793	대북 지원 강화 보다 더 지지
대미 동맹 강화	3,128	3,205	.077*	789	대미 동맹 강화 더 강하게 찬성
사교육 규제 강화	2,501	2,188	-.313***	784	사교육 규제강화 더 강하게 반대
국가 발전 위해 개인 권리 침해 가능	1,961	2,239	.279***	788	국가 발전 우선에 덜 반대
이념적 정향 (11점 척도: 0~10)	5,610	6,058	.448***	659	이념적 보수성 증대

\*  $p < .05$ , \*\*  $p < .01$ , \*\*\*  $p < .001$  (2-tailed t-test)

## 1) 유권자 이념 성향

우선,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은 정치적 정보가 충분할 경우, 정치적 정보가 부족할 때에 비해 이념 정향에 있어서 보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은 특히 한국사회의 보수화가 강하게 나타난 시점이었는데,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택이 2003년 연구결과를 통해 주장하는 바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원택(2003)은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적 특성은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반면, 고소득층, 고학력층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우리 사회는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계층, 즉, 고학력, 고소득층이 보다 더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의 이념적 균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최준영·조진만 2005) 우리 유권자들이, 특히 정치적 정보가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적 성향을 일치시키게 되는, 서구 사회의 유형을 점차 보여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책에 대한 선호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6개 정책 이슈 중 4개 이슈에서 일반 유권자에 비해 보다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정보가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성향을 대체로 보수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치적 정보의 양의 증대가 전체 정책에 대한 선호를 동일한 이념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즉, 정치적 정보의 양이 분석의 대상이 된 모든 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를 매우 유의미한 차이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가 모든 이슈에 있어서 어느 특정 방향의 이념적 성향으로의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사람은 개별 이슈들을 이념적 스펙트럼에 연관시킨 후 개별 정책들에 대해 이념적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Converse 1964)는 서구 학자들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유권자들이 아직은 개별 정책과 이념 스펙트럼을 연관시켜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 외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정보가 많은 사람들도 개별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다차원적 혹은 중첩적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 정책 이슈별로 보면,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얻었을 경우, 이들은 2008년 총선의 실제 유권자에 비해 대북지원과 대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를 원하고, 재벌규제와 사교육 규제, 그리고 복지 예산 축소는 상대적으로 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 가상 유권자들은 실제 유권자들에 비해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 침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덜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재벌 규제 전면 해제

개별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먼저, 실제 응답자들의 의견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된 가상 유권자들(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정책 이슈는 재벌 규제와 관련한 항목이다.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재벌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데에 보다 강한 찬성을 보내고 있다. 실제 유권자 평균과 가상 유권자들의 평균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주목할 일이지만, 특히 재벌 규제 해지에 ‘대체로 반대~보통’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실제 유권자들과는 달리 5점 척도에서 4점이 넘는 값을 보이며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은 재벌 규제해지에 ‘전면적인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만한 사실이다. 2004년과 2007년의 유권자 이념 성향을 비교 분석한 임성학(2009)의 연구에 의하면, 2007년의 유권자들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경제적 이슈, 그중에서도 정부의 빈민지원 확대 문제와 더불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개입 문제에 있어 그들의 진보/보수 성향의 차이를 확실히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의 가상 유권자들은 재벌 규제 해제를 강하게 찬성함으로써 그들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 성향에 더 가깝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사교육 규제 강화

사교육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진 가상 유권자들은 실제 유권자들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유권자들의 평균이 규제와 규제 해제의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데 반해, 정치적 정보가 많아지면서 가상 유권자들은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정보가 사교육 규제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실제 평균과 가상 평균 간의 차이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치적 정보의 획득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 (3) 복지 예산 축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가상 유권자들은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축소에 반대하면서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유권자들도 복지 예산 축소에는 대체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정보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경우 이들은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보다 더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 (4) 대복지원 강화

대복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 유권자들과 가상 유권자들은 모두 중간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둘을 비교하면 충분한 정보를 가진 가상 유권자들이 대복지원에 대해 일반 유권자들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 약간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성학(2009)의 연구는 2007년 유권자들의 대복지원에 대한 태도가 2004년에 비해 훨씬 강경해지고 보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복지원 이슈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졌더라면 대복지원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덜 강경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대복지원도 지금보다는 유연한 형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겠다.

### (5) 대미동맹 강화

대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가상 유권자들이 실제 유권자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즉 조금 더 보수적 포지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정책 이슈에 비해 대미동맹 강화는 실제 유권자들과 가상의 유권자들이 모두 대체로 강하게 찬성하는 이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유권자간의 차이도 가장 작은 항목이다.

### (6) 국가 발전 위해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실제 유권자들

과 가상 유권자들이 모두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데에 대체로 반대하면서도 정치적 정보가 많은 가상 유권자들은 실제 유권자들보다는 이 문제에 덜 반대하며 조금 더 중간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유권자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인 국가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가상 유권자들은 실제 유권자들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과 대북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유권자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이슈에 있어서 실제 유권자들과 가상 유권자들은 그 찬반의 방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벌에 대한 규제 전면 해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과 실제 유권자들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크며, 여론의 방향 또한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제 유권자들은 재벌에 대한 규제의 전면 해제를 '대체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상 유권자들은 '전적으로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보인다. 따라서 이 이슈에 있어서 정치적 정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정치적 정보가 충분해지면 이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인들의 정책적 포지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산출되는 정책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실제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도 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으로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진다 해도 각 정당이 또는 정치인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정책을 포지션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2008년과 같이 정치적 정보의 효과가 대부분의 정책에서 보수적

성향을 결과하거나 또는 하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향하게 되는 경우에, 정치적 정보의 확대에 의해 불리해지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의 확대는 오히려 막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이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매니페스토를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정책을 위주로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각 정당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정책 이슈만을 적극적으로 프라이밍(Priming, 이소영 2009)하게 되어 실제 중요한 정책 이슈들이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정보의 확대는 정치 전략과 밀접히 관련된 이슈로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전제이면서 동시에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일면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 2. 정치적 정보와 유권자의 투표선택 및 투표참여 (프로빗 분석)

이 절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졌을 경우 2008년 총선 유권자들의 지역구 투표선택, 정당 투표선택, 그리고 투표 참여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을 것인가를 프로빗 분석에서 나온 계수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3〉은 유권자들의 지역구 후보자 선택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이다. 앞서 정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빗 계수를 이용하는 데 프로빗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세 개 프로빗 분석 결과를 모두 보여주는 대신 지역구 투표선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프로빗 분석의 전체 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프로빗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유권자들의 지역구 후보자 선택 변수는 이분법적 변수값을 사용해야 하는 프로빗 분석의 특성상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1,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0으로 코딩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만 이 분석에 포함되고 그 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

〈표 3〉 지역구 투표선택에 대한 프로빗 분석 (1=한나라당 후보, 0=민주당 후보)

독립변수	메인 효과 (Main Effects)		인터랙션 효과 (Interaction Effects)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정치정보수준	-.506	.372		
교육수준	-.555	.401	.051	.036
가정의 수입	-.041	.038	.003	.003
나이	.021	.051	-.003	.005
성별(여성)	.286	1.157	.005	.099
농어촌지역 거주	-.387	1.915	-.069	.162
도시지역 거주	1.371	1.264	-.107	.111
결혼	.030	1.236	.010	.111
본인/가족 노조가입	4.006	2.880	-.338	.241
화이트칼라	2.897+	1.693	-.292*	.147
블루칼라	3.378	4.119	-.211	.345
자영업자	1.668	1.546	-.143	.128
가톨릭신자	-4.551*	2.235	.348+	.187
불교신자	-.195	2.041	.027	.170
개신교신자	1.112	1.936	-.080	.161
기타 종교	.299	2.094	.010	.174
호남 출신	-.777	1.378	.020	.118
영남 출신	-.412	1.549	.128	.131
한나라당 선호	.210	1.510	.147	.129
민주당 선호	-.001+	1.483	.153	.132
상수	4.757	4.195		
Pseudo R-squared	0.568			
N	387			

+p &lt; .10, \* p &lt; .05

문에 이번 조사 자료에서 각각 약 5~6%의 응답자들이 선택한 자유선진당 후보나 친박연대 후보 및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투표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결과에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대다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투표자들<sup>2)</sup>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이 정치적 정보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정보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양대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가 전체 유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 결과와 심각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빗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 수준을 비롯해 위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유권자들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당선호 등을 모두 고려한 상황에서 정치적 정보 수준이 정치적 선택 및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빗 분석에도 이들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변수들 중에서 유권자들의 지역구 후보자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p < .10$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직업에 있어서 화이트 칼라 여부, 가톨릭 신자 여부, 그리고 이들과 정치적 정보와의 인터랙션 및 유권자의 민주당 선호 여부이다. 즉, 화이트 칼라 직업일수록, 가톨릭 신도가 아닐수록,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을수록 한나라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며,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 수준이 화이트 칼라 직업과 가톨릭 신자 여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변수들의 프로빗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에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통계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의 목적인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이 통제된 상황

2) 본 연구에 활용된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2008년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에서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자에 투표한 응답자는 전체 투표자(644명)의 47.4%, 민주당 후보자에 투표한 응답자는 25.2%로 이 양대 정당 후보자에 투표한 응답자가 약 72.6%(467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 중 약 40.5%, 통합민주당에 투표한 응답자는 약 20%로 양대 정당에 투표한 응답자가 전체 투표자의 약 60.5%(38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실제 유권자들과 가상 유권자의 투표 행태

투표행태	실제 확률	가상 확률	확률 변화	N	정치적 정보 효과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할 확률	.638	.700	.062	387	한나라당 후보 선호
정당 투표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할 확률	.636	.738	.102	325	한나라당 선호
투표 참여율	.650	.689	.039	816	투표 참여율 상승

에서의 정치적 정보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수들을 생략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들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기로 한다.

〈표 4〉는 2008년 총선의 실제 유권자들과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가상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를 선택할 확률,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할 확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확률을 비교한 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당 및 후보자 선택에 대한 프로빗 분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투표자들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 4〉에 나타난 확률은 실제 선거 결과보다는 과대 평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먼저, 후보자 및 정당 투표 선택에 있어서 정치적 정보가 충분해지면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확률과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할 확률이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혹은 양대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만을 고려할 때,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가상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은 2008년의 실제 유권자보다 약 6%가 증가하였으며, 정당 투표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할 확률은 무려 10%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정책 이슈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상 유권자들의 상대적인 보수적 성향과 정책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2008년 총선 캠페인 당시 한나라당이 정책이나 이념적 이슈 대신 국정 운영의 안정적 운영의 필요를 캠페인 이슈로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임성학 2009, 39), 이 결과는 선거 캠페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을 가상 유권자들이 이 국정안정론에 일반 유권자들보다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시

사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투표참여율은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짐으로써 약 4%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되었듯이, 정치적 정보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정보가 정치적 관심을 고취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왔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참조). 본 연구에서 4%의 투표율 상승이 정치적 정보의 효과로 측정되기는 하지만, 이 값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기대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아마도 18대 총선에서 정치적 정보가 부족한 일반 유권자들도 정치적 정보량에 관계없이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정보가 많아진 후에도 참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에 필요한 정치적 정보 정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정치사회가 유권자 동원에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결과이기도 한 반면, 정치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표결정이 가능한 우리 선거 문화의 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즉,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감정이나 지역적 균열 등 비정책적 이슈 중심으로 우리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도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은 건전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지만, 정책이나 이념에 대한 정보 없이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과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 3. 정치적 정보 수준의 사회경제적 요인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는 2008년 총선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졌을 경우 이념적으로 보다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될 것이며,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책에 있어서는 개별 정책 간의 이념적 일관성이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표 5〉 정치적 정보 수준의 사회경제적 요인 (회귀분석)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교육수준	.196*	.082
가정의 수입	.385*	.148
나이	.002	.011
성별(여성)	-.639**	.240
농어촌지역 거주	.175	.387
도시지역 거주	.063	.257
결혼	.724*	.289
본인/가족의 노조가입	-.448	.382
신문 및 TV 노출 빈도	.297*	.128
인터넷 노출 빈도	.073	.121
정당에 대한 호감 정도	-.013	.074
상수	8.113	.925
R-Squared	0.2156	
N	451	

\*  $p < .05$ , \*\*  $p < .01$

- 신문 및 TV 노출 빈도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이 일간신문(종이신문)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빈도 (4점 척도)

- 인터넷 노출 빈도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 (4점 척도)

- 정당에 대한 호감 정도는 유권자들이 가깝게 느끼는 정당에 대한 친근감 정도 (3점 척도)

경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렇다면 개별 유권자들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정치적 정보 수준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다시 보수적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일까? 〈표 5〉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 수준을 주요 사회경제적 배경 항목을 독립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의 수입이 높을수록, 남성 유권자일수록, 결혼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빈

도가 높을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 수준이 높다. 유권자의 나이나 사는 지역,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인터넷 매체에의 노출 빈도, 그리고 정당에 대한 호감 정도 등은 정치적 정보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가 특정 사회경제적 계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고소득층, 고학력층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는 강원택(2003)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고소득층, 고학력층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적 정보가 높은 유권자들 즉, 사회적 상위 계층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적 성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정치에 대한 참여와 정책결정에의 영향력이 강한 고소득층과 고학력층 유권자들의 보수적 성향은 우리 사회의 여론과 정책의 보수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층, 고학력층, 남성, 그리고 결혼한 유권자들에게로의 정치적 정보의 편중이 결국 정치적 충원 및 정책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대표성에 중요한 결함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정치적 정보의 불균등한 분포가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2008년 18대 총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졌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이념성향과 후보자 및 정당선택, 그리고 투표참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진 유권자들은 연구의 대상이 된 모든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서 실제 유권자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재벌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유권자들이 재벌 규제 해제에 ‘대체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정치적 정보가 충분할 경우 유권자들은 재벌 규제 해제에 ‘전적으로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정보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은 재벌 규제 문제뿐 아니라 사교육 규제, 대미 동맹 강화,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 및 이념성향에서도 실제 유권자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대북지원 강화와 복지예산 축소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유권자들보다 오히려 약간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정보가 충분한 유권자들은 또한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도 실제 유권자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의 결과, 2008년 유권자들은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가졌을 경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정보가 충분하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도 재확인되었다. 다만, 그 영향의 크기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 수준은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소득층 및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이 정치적 정보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치적 정보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정보가 특정 이념과 특정 정당 및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정치적 정보의 확대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정보를 소통할 동기와 이유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치적 정보의 부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정당 및 정치인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정책 이슈를 소통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미디어에 보다 많이 노출되거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는 상위계층은 여러 소통의 통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치적 정보를 얻을 소통의 통로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하위계층은 정보에서 보다 더

멀어지는 정치적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정치적 정보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또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시민교육을 통해 사회 모든 계층에게 정치적 정보를 교육하고 전파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매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정책선거를 실현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책선거의 정치적 결과가 특정 정당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정책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구는 현실화되기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정보의 편중적 분포와 그것이 초래하는 정치적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다소 고무적인 사실은 현재로서 적어도 한 정당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가 확대됨으로써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이 정당은 과거 우리의 선거 과정에서 보이듯이 이미지나 선정적 혹은 감정적 이슈들을 통해 선거 운동을 전개하는 대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는 선거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하나의 정당이 일단 정책을 위주로 한 선거캠페인을 전개할 경우, 다른 정당들도 정보의 확대에 의한 혜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선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들은 투표시 위험성을 꺼리는(risk-averse)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Bartels 1986; Berinsky and Lewis 2007)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시켜 보자면, 하나의 정당에 대한 정책적 정보가 유권자들 사이에 확대가 되면 그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여타 정당들도 정책 선거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학 연구들은 ‘정책 선거의 정착을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 위주의 선거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제안보다는, 정책 선거가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이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정책 선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된 본 연구는 그러나 우리사회가 급격히 보수화되고 스스로의 이념성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

던 2008년<sup>3)</sup>의 유권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가진다. 2002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한국인의 이념을 조사한 동아시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인기도에 따라 한국인의 이념적 지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던 이명박 정권 초기의 자료에 의지한 본 연구는 더욱 시기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겠다. 실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2008년 봄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09년 초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크게 낮아졌고, 스스로를 보수로 칭하는 유권자들의 비율도 33.2%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간경향 2009년 5월 7일).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총선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 조사 자료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자료의 한계는 정치적 정보의 측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한계를 노정하는 요소이다. 즉, 조사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치적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차원의 문항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정보 수준 측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서의 유권자 성향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위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를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

3) 2002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한국사회 이념지형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보고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2008년 2월에 보수 45%, 진보 25.4%, 중도 29.1%로 스스로를 보수성향으로 평가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출처: 『주간경향』, 2009년 5월 7일).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이소영. 2009. “인지구조와 투표행태, 그리고 대중매체.”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57-187.
- 임성학. 2009. “한국의 선거와 이념: 정치사회와 유권자의 상호관계.”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4(2). 37-66.
- 주간경향. 2009. “한국 이념지형지도 수시로 ‘변덕’.” 『주간경향』, 5월 7일.
-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Althaus, Scott L. 1998. “Information Effects in Collective Preferenc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545-58.
- Alvarez, R. Michael. 2001. *Information & Elections*.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Alvarez, R. Michael, and Charles H. Franklin. 1994. “Uncertainty and Political Perceptions.” *Journal of Politics* 56(3): 671-688.
- Bartels, Larry M. 1986. “Issue Voting under Uncertainty-an Empirical-Te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4): 709-728.
- \_\_\_\_\_. 1996. “Uninformed vote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194-230.
- Bartle, John. 2000. “Political Awareness, Opinion Constraint and the Stability of Ideological Positions.” *Political Studies* 48: 467-484.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80. *The American Voter*, Unabridge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Basic Books.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shkin, James S., and Robert C. Luskin. 1999. “Bringing Deliberation to the Democratic

- Dialogue: The NIC and Beyond.” In Maxwell McCombs (ed.), *A Poll with a Human Face: The National Issues Convention Experiment in Political Communi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lasgow, Garrett. 1999. “Respondent Uncertainty of Candidate Issue Positions and Its Effects on Estimates of Issue Sali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Goren, Paul. 1997. “Political Expertise and Issue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 387-412.
- Jacoby, William G. 1986. “Levels of Conceptualization Reliance on the Liberal-Conservative Continuum.” *The Journal of Politics* 48(2): 423-231.
- \_\_\_\_\_. 1988. “The Impact of Party Identification on Issue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643-661.
- \_\_\_\_\_. 1991. “Ideological Identification and Issue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1): 178-205.
- \_\_\_\_\_. 1995. “The Structure of Ideological Thinking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2): 314-335.
- Judd, Charles M., and Cynthia M. Lusk. 1984. “Knowledge Structures and Evaluative Judgments: Effects of Structural Variables on Judgmental Extre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6): 1193-1207.
- Kuklinski, James H., and Paul J. Quirk. 2000. “Reconsidering the Rational Public: Cognition, Heuristics, and Mass Opinion.” In Arthur Lupia, Mathew D. McCubbins and Samuel L. Popkin (ed.), *Elements of Reason: Cognition, Choice, and the Bounds of Ration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3-182.
- Lau, Richard R., and David P. Redlawsk. 2001.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gnitive heuristics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951-971.
- Linville, Patricia W. 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 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2):193-211.
- Lupia, Arthur. 1994. “Shortcuts Versus Encyclopedias: Information and Voting Behavior in California Insurance Reform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1): 63-76.

Lupia, Arthur, and Mathew D. McCubbins. 1998. *The Democratic Dilemma: Can Citizens Learn What They Really Need to K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uskin, Robert C., James S. Fishkin, and Roger Jowell. 2002. "Considered Opinions: Deliberative Polling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455-487.

Miller, Arthur H., Martin P. Wattenberg, and Oksana Malanchuk. 1986. "Schematic Assess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521-540.

Mondak, Jeffery J. 1993. "Public Opinion and Heuristic Processing of Source Cues." *Political Behavior* 15(2): 167-192.

Nicholson, Stephan P., Adrian Pantoja, and Gary M. Segura. 2006. "Political Knowledge and Issue Voting Among the Latino Electorat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2): 259-271.

Nisbett, Richard, and Lee Ross. 1980. *Human Inferences: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pkin, Samuel L. 1991.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Campaig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hn, Wendy M., John H. Aldrich, Eugene Borgida, and J. Sullivan. 1990. "A Social-Cognitive Model of Candidate Appraisal." In *Information and Democratic Process* (ed.), J. Ferejohn and J. Kuklinski. Champaign-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Sniderman, Paul M., Richard A. Brody, and Philip E. Tetlock. 1991. *Reasoning and Choice: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Zaller, John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Information Effects in Political Preferences and Choices: Focusing on Korean Voters in 2008

Lee, So Young |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outcomes of the uneven distribution of political information using the 18th Korean General Election data. Using the simulation method assuming that all voters are fully informed, this study tries to see how individual opinion may change if the public is better informed about poli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voters in 2008 might not only be more conservative in their ideology and in their policy positions, but more likely to vote for the conservative presidential party,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candidates from that party. In addition, the fully informed opinion is more likely to come to the voting booth. These results suggest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inform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need for the strategic effort to curtail the effect of the uneven distribution of political information.